

국민 분노에 친박마저 '백기'...벼랑끝 박근혜

개헌 고리 임기축소도 논의...비박계 "환영"

야 "탄핵 앞 중도·비박 이탈 막으려 꼼수"

친박계 '대통령 퇴진' 공감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중진 의원들이 28일 박 대통령에게 '명예 퇴진'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전날 전직 국회의장 등 원로들이 늦어도 내년 4월까지의 하야할 것을 제안한 데 이어 여당 주류 측이 사실상의 '하야'를 요청하기로 함에 따라 박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아권에서는 새누리당 친박 중진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당내 비박(비 박근혜) 진영의 탄핵 찬성으로의 이탈을 막기 위한 '꼼수'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친박 중진 의원들이 오늘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하고 박 대통령에 대해 '명예로운 퇴진'을 건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직 국회의장 등 정치권 원로들의 제안도 있었고 촛불 집회 등 국민적 분노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거취를 결심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는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 최경환, 유기준, 홍문종, 윤상현, 조원진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서 일부 참석자는 박 대통령이 소명의 기회도 갖지 못한 상황에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을 내놓기도 했으나 일단 '명예 퇴진' 건의를 전달하자는 데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대통령의 '임기 축소' 방법론으로 개헌 문제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야는 헌법을 벗어나는 결정인 만큼 개헌을 고리로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러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박 및 중도 진영에서도 일단 환영의 의사를 나타냈지만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비박계 인사는 "친박 진영에서 박 대통령의 명예 퇴진을 추진하는 것은 평가 받을 만하다"면서도 "하지만, 박 대통령이 명예 퇴진을 받아들일지 미지수인데 이

미시기를 놓쳤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낮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아권에서는 새누리당 친박 진영이 꼼수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 수사와 촛불 민심에 밀린 친박 진영이 박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중도 및 비박 진영의 이탈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명예 퇴진 카드도 개헌 등을 연계, 새누리당의 분당을 막으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활로를 찾고자 하는 계산이 숨어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아권은 박 대통령 탄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정의당 이

정미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내달 2일 추진한다는데 합의했다.

아권 일각에서는 탄핵에 찬성하는 새누리당 비박 진영의 의견을 듣는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일 표결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아권 관계자는 "새누리당 친박 진영의 '박 대통령 명예 퇴진 건의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에게는 이미 명예 퇴진의 기회도 사라진 상황이며 친박 진영은 사실상 정치적 패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 윤리위, 박대통령 징계 착수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8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당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진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참석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 당헌·당규는 윤리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징계 절차에 착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윤리위원 대부분이 징계 절차 착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리위는 박 대통령에 대해 10일 안에 소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박 대통령의 소명을 근거로 다음달 12일 회의를 열어 본격적으로 징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새누리당 비상사국회의 소속 비주류 의원 29명과 원내 당협위원장 7명은 지난 21일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당 사무처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당원 징계 수위를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두고 있다.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국회의장,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정세균 국회의장(오른쪽 두번째)이 28일 오후 국회 의정실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왼쪽),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왼쪽 두번째), 더불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 손 놓은 청와대

40일째 내부회의만...탄핵 대응 전략도 진전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궁지에 몰리면서 청와대가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이후 이날까지 40일째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 등 국정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측은 박 대통령이 내부적으로 외교·안보·경제현안을 챙기고 있다고 전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한광옥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정부·홍보·민정수석 등이 수시로 회의를 열어 탄핵정국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 등 정책

라인은 이 회의에 고경멤버로 참여하지 못해 각종 정책 대응에서 누수 현상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청와대가 정부적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데도 국민의 퇴진 요구에 어떤 해법도 못 내놓고 있다.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박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탄핵 전에 입장을 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탄핵안 발의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 진술하게 다시 한 번 사과하면서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지만 특별하게 진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문체부 스포츠계 비리, 정유라·장시호 특혜 입학 추적

송기석 의원 최순실 정국 '고군분투'

최순실 국정농단 정국에서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서구 갑)의 고군분투가 돋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최순실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측면 지원 의혹을 제기했고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최순실씨가 문체부의 지원과 K스포츠 재단을 배경으로 국내 더불어민주당과 독일 더블루K, 비텍 등을 통해 수익을 챙기려 했던 정황을 정확히 그려낸 것이다. 송 의원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은 물론 중고등학교에서의 비정상적인 출석 상황 등을 잇달아 밝혀내면서 '촛불'의 동력인 국민적 분노를 이끌어 냈다. 송 의원은 이어 최순실씨 조카 장시

호씨의 고등학교 성적 등을 공개하며 금전을 토대로 한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을 제기하는 등 범조계에서 쌓아온 내용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최순실씨 언니 최순득씨 운전기사의 증언을 토대로 최순득씨가 유명 연예인들과 어울리며 라디오 프로의 선곡까지 주물렀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사태는 국민적 분노를 넘어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한 점 의혹이라도 끝까지 추적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 비대위원장, 비주류 추천인사에 전권 위임"

3+3 회동 합의...이정현·이장우 "수용 불가"

새누리당 주류(원유철·정우택·홍문종)와 비주류(김재경·나경원·주호영) 중진의 6명은 28일 비주류 측이 추천하는 비상대책위원장을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임명하는 방안 합의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이른바 '3+3 회동'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비주류가 추천한 3명의 비대위원장 후보 가운데 1명을 '3+3 협의체'에서 선택한 뒤 의총 추인을 거치자는 것이다.

이들은 또 비대위 구성의 전권을 비대위원장에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30일 오후 다시 회동해 비주류 측이 추천하는 3명의 비대위원장 명단을 받기로 했다.

주호영 의원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주류를 대표해 나온 분들이 당헌·당규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현 친박(친박근혜)계 지도부가 이 방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다음달 21일 사퇴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중진협의체가 비대위원장을 추천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기(중진협의체)에서 추천했으니 무조건 받으라고 하는 부분은 나머지 초재선 의원을 포함한 당의 구성원, 그리고 국회의원 외에 평생을 두고 당비를 내기며 당과 보수 가치를 지키는 수십만 당원이 있는데 가능하겠느냐"며 "그런 식으로 가면 당이 화합하기 어려우니 어떤 안인데 (다른 안

을 내라"고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장우 최고위원도 기자들과 만나 "비주류가 3인을 추천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면서 "비주류 측에서는 원내대표도 특정한 누구로 추천해달라고 하는 등 상당한 정치적 목적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주류 친박계에서는 현 최고위원단 사퇴 시 원내지도부의 동반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주류와 비주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역시 장애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출금리 : 4.7% ~ 4.9%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